

원희룡 장관, “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하여, 진정한 노사법치주의 실현할 것”

- 건설공사 피해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(금)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, 건설노조 동조파업의 확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,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-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(12.2)하고 부·울·경 지역을 시작(12.6)으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동조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- 원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대해 “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불모로 하는, 없어져야 할 관행”에 불과하다면서,
 - “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, 건설노조 또한 동조파업을 즉각 중단하라”고 촉구하며,
 - “업무방해, 채용강요, 금품 요구 등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여,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건설업계에도 “건설노조의 불법행위 발생 시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줄 것”을 당부하면서,
 - “윤석열 정부는 노조의 불법, 부당 행위를 눈감아주는 잘못된 관

행을 반드시 끊어낼 것”이라고 강조하고,

○ “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를 통해 정의가 실현된다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확실히 보여주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피해 신고는 국토교통부(☎1577-8221) 또는 경찰청(112)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12. 9.

국토교통부 대변인